

“아리셀 같은 참사 다신 없게”... ‘현장노동자가 직접 위험성 평가 참여’ 개정안 발의

✎ 조연주 기자 | © 승인 2025.06.24 20:05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1주기
위험성평가 실질화 산안법 개정



민주노총과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주최한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1주기, 위험성 평가 실질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발의 기자회견'이 24일 오후 4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개최됐다. 사진=이용우 의원실

참사가 있기 전까지 수차례 화재와 폭발 위험이 감지됐던 아리셀은, 참사 직전까지 고용노동부의 위험성 평가를 통과했을 뿐 아니라 3년 연속 우수사업장을 선정되기까지 했다. 23명의 목숨을 앗아간 아리셀 참사는 허울뿐인 위험성 평가가 어떻게 참사로 이어지는지 보여준 중요한 계기가 됐다.

아리셀(모회사 에스코넥) 중대재해 참사 1주기를 맞아, 민주노총은 위험성 평가가 '기업들의 안전보건조치 면피용'이 아닌 실질적으로 노동현장에서 발휘할 수 있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주노총과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주최한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1주기, 위험성 평가 실질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발의 기자회견이 24일 오후 4시 40분 국회소통관에서 개최됐다.

법 개정의 주요 내용은 ▲고객에 의한 폭언 폭행 등 감정노동을 위험성 평가 대상 포함 ▲원청의 개선조치 등 원청의 의무 명확화 ▲위험 방지 조치 대상을 하청, 특수고용 노동자까지 확대 ▲노동자 대상 교육 실시 의무 ▲평가 전 과정에 노동자 참여 실질화 ▲노동부 보고 의무 및 미보고시 처벌조항 도입 ▲정기 감독 의무 및 미실시하거나 부적절하게 실시할 경우 처벌조항 도입 등이다.

이중 위험성 평가 전 과정에 노동자 참여 실질화를 위한 개정에는 노동자대표나 명예산업안전보건감독 등의 참여 보장과 위험성 평가 참여 시간을 유급 보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은 '하청, 특수고용노동자, 감정노동 등 모든 노동자의 실질적 참여'를 명시하고 있다.

이들은 "아리셀은 위험성 평가를 제대로 실시하지 않고, 복사 붙이기식으로 진행했는데도 위험성 평가 인정심사를 통과했다. 3년 연속 우수사업장으로 선정돼 2022년에서 2024년까지 산재보험료율 17-20% 감면받았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사업장의 위험요소를 사전에 확인해 조치하자는 위험성 평가 제도의 문제점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더해 "윤석열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처벌보다 예방이라며 위험성 평가를 핵심으로 하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했으나 로드맵에서 발표했던 위험성 평가 처벌조항 도입조차 추진하지 않고, 현장에서 형식적인 위험성 평가가 횡행하고 있다. 정부도 매년 외치고 있지만 실질 제도개선과 대책은 내놓지 않는다"고 지적을 이어갔다.

이미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위원장은 "파면된 윤석열 정부가 중대재해 감축의 핵심 사업으로 위험성 평가에 감독행정, 사업, 예산과 인력을 쏟아 부었지만, 현행 법에서는 위험성 평가에 대한 아무런 처벌 조항도 없고 노동부 보고의무도 없어 정부 감독은 커녕 현황 파악조차 하지 않고 있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었다"고 전한 뒤 "민주노총은 아리셀 참사 1주기, 다시 투쟁을 결의한다. 중대재해 처벌 강화만이 노동자 산재사망을 줄이는 길이며 중대재해 예방의 핵심인 위험성 평가 실질화를 위한 법개정으로 모든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앞장서 싸울 것"이라고 전했다.



민주노총과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주최한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1주기, 위험성 평가 실질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발의 기자회견'이 24일 오후 4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개최됐다. 사진=이용우 의원실



민주노동총과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주최한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1주기, 위험성 평가 실질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발의 기자회견'이 24일 오후 4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개최됐다. 사진=이용우 의원실

김태윤 아리셀 산재피해 가족협의회 공동대표는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노동부는, 아리셀이 자체적으로 평가해 매해 해당년도만 바꾼 위험성 평가서를 토대로 3년 연속 우수사업장으로 선정하고 산재보험료를 감면해줬다. 또한 고위험 유해물질 사업장임을 알고 도, 4차례의 폭발 특히 참사 2일 전인 22일 폭발사고에 특별근로 감독을 실시하지도 않았다"고 비판하면서 "현실을 명확하게 판단하고 진상을 규명해야만 반복되는 죽음을 막을 수 있다. 단편적인 위험성 평가의 기준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불안정한 고용의 구조, 산업안전보건 전반에 걸친 문제로 연결돼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유청희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집행위원장은 "아리셀에 대한 위험성 평가는 형식적인 평가뿐이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매년 사업주에게 실시 의무를 부여했음에도 각 노동현장에 맞는 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실질적인 현장 변화로 이어지지도 못했다. 사업주가 형식적으로 진행하더라도, 노동자 참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사업주를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현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더해 "현장의 위험을 가장 잘 아는 이는 바로 노동자들이다. 위험 기준을 정하고, 위험을 추정한 후 평가하고 제거하는 것까지 모든 과정에 노동자들이 참여해야 한다. 특히나 현재 법제도에서 전혀 규정하지 못하고 있는 하도급 업체 소속 노동자들의 유해.위험 요인에 대해서, 그리고 특수고용형태근로자의 유해.위험 요인 역시 이들의 평가 과정을 통해 위험을 제거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끝으로 이들은 "아리셀 참사 1주기에 산자들이 바뀌어나가야 할 작은 노력이지만 커다란 의미를 가지는 일이다. 더 이상 안전을 뒷전에 두고 형식적 안전관리체계로 대중 넘기는 관행에 제동을 걸고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하는 현장으로 바뀌어나갈 것이다. 모든 노동자의 안전할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고 산재를 줄이는 제도개선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과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주최한 '아리셀 중대재해 참가 1주기, 위험성 평가 실질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발의 기자회견'이 24일 오후 4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개최됐다. 사진=이용우 의원실

 조연주 기자 kctu.news@gmail.com